



# 보도참고자료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

하나된 열정  
하나된 대한민국



배포일시 2018. 2. 2.(금) 06:00  
총 14매(본문 9)

담당 부서	국토정책과 (총괄, 계획계약, 강소도시권 등)	담당자	·과장 김규철, 서기관 나진향, 주무관 김봉길 ·☎ (044) 201-3646, 3650, 3653
	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(혁신도시)	담당자	·과장 이창희, 사무관 양종호 ·☎ (044) 201-4456, 4458
	도시재생사업 기획단(도시재생 뉴딜)	담당자	·과장 윤의식, 사무관 조민우, 심재문, 주무관 전성환 ·☎ (044) 201-4907, 4908
	지역정책과 (역사문화권)	담당자	·과장 손덕환, 서기관 이경제 ·☎ (044) 201-3662, 3665
	산업입지정책과 (산업단지)	담당자	·과장 표용철, 사무관 천지민 ·☎ (044) 201-3674, 3677
	복합도시정책과 (새만금, 행복도시)	담당자	·과장 한성수, 사무관 김성환 ·☎ (044) 201-3684, 3689
	동서남해안 기획단(지역계획)	담당자	·과장 황운언, 사무관 서정관 ·☎ (044) 201-4546, 4551
보도일시	2018년 2월 2일(금) 10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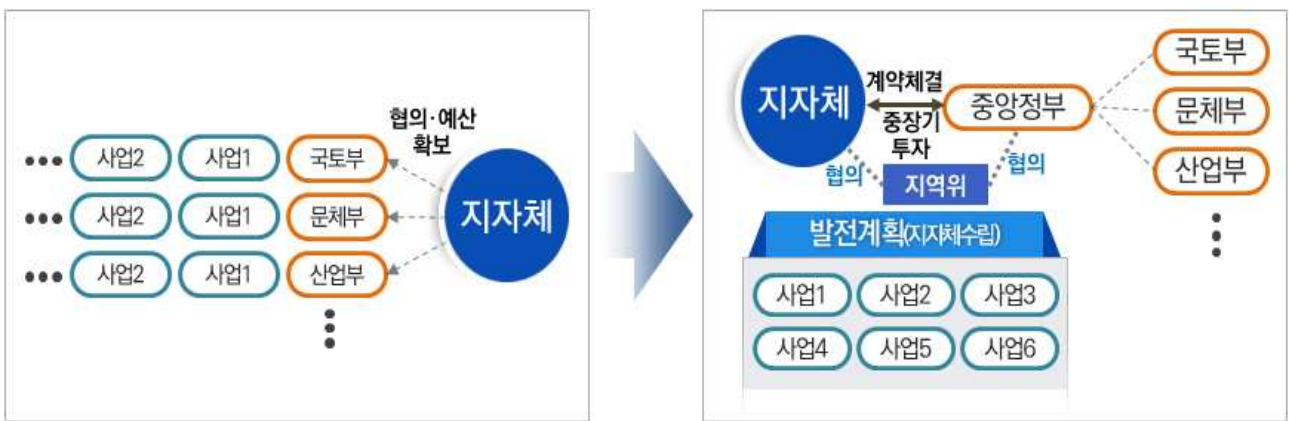
## 국토부,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

**혁신도시 시즌2, 혁신도시의 新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힘차게 첫발  
도시재생 뉴딜,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와 발맞추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.
- 혁신도시, 행복도시,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,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,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인 분권, 포용, 혁신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.

□ 먼저,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.

- 지방분권을 지향하며,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,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.
- 계획계약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화하여 지원되고,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-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,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도 지원(시범사업 11개 추진)할 예정이다.

□ 지역 성장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.

- 세종시는 행정안전부,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,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,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.

- 또한,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·오송 등 인근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.

-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·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.

- 또한, 세계챔버리대회('23)의 성공적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·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, 재생에너지·스마트팜 사업 등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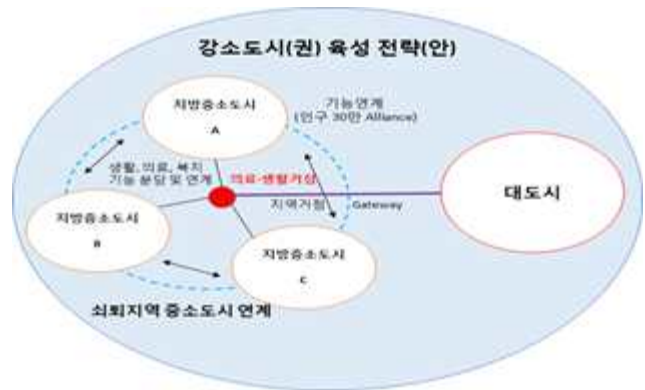
□ 산업단지는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어진다.

- 판교 제2밸리에서 선보인 공공임대 창업공간 및 범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하여 지역에도 혁신과 창업의 불을 만들어 나간다.
- 또한,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로 지정하고,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함께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다.

□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간 연계·협력을 지원한다.

- 연계협력형 지역계획(7개)을 본격 수립하고, '17년 수립이 완료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,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.

- 또한, 중·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방 도시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.



- 생활·의료·교육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,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.

-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생활·의료·교육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\*하고, 대중교통망 구축 등 도시간 연계를 강화하여 인근에서 거점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\* 지역거점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관계부처 TF(팀장: 국토부 1차관)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, 문화도시, 어촌 뉴딜, 여성친화도시 등 연계 검토

- 역사·문화·자연 등을 매개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,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본격화 된다.

- 특히, 『혁신도시 시즌2』와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.

### 「혁신도시 시즌2」, 지역의 활력과 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

-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.

- 2005년 시작된 「혁신도시 시즌 1」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였다면, 시즌 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, 중앙정부가 뒷받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다.

-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.

-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.

※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금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,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'22년부터는 30%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

-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, 연구기관, 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하고,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여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.
- 또한, 각 혁신도시들은 고유한 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.
  - 전기·에너지 등을 테마로 한 광주·전남혁신도시는 스마트그리드를,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 등 특색 있는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,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.
  - 이전 기관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, 의료, 문화·복지 등 도시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. 공동 직장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종합병원, 119 안전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고,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.
  -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되면 58%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도 '22년까지 75%로 높아질 전망이다.
-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, 기업집적을 활성화하여 '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천개까지 늘리게 된다.
  - 혁신도시별로 구축되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창업·혁신기업 등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,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성장 인큐베이팅도 강화한다.
  -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, 혁신도시형 투자선도 지구 지정,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게 되고, 혁신도시 인근에 인력 양성-공동R&D-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.

- 혁신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감소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**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**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.
  -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**도시재생사업**을 통해 **지역생활권내 상생 균형발전**을 모색하고, 구도심과 연계하여 **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**를 구축한다. 또한, 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나누기 위한 **상생발전기금 조성**도 촉진한다.
  -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-지자체-공공기관 **협력 클러스터 조성**을 지원하고, 혁신도시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신선 농산물, 6차 산업 제품 등 **지역생산물 직거래**도 활성화한다.
-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·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**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**을 금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,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**혁신도시특별회계**도 재정비할 계획이다.

※「자세한 내용은 」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별첨] : 『혁신도시 시즌2』추진방안

**도시재생 뉴딜,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**

-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**도시재생 뉴딜사업**을 본격 착수한다.
  - 지난해 선정한 **68곳**의 시범사업을 **속도감** 있게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,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**뉴딜사업 선정계획**을 마련(18.3)하여 **100곳 내외\***를 선정(18.8) 할 예정이다.
    - \*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
  - 특히 전체의 **2β 수준(66곳 내외)**을 **광역지자체**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, **소규모 사업\***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(18.4)하는 등 “**지역 밀착형 뉴딜사업**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\* (예) 마을도서관, 돌봄서비스 공간, 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등

□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.

○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\*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(‘18.2)

\*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‘18.2.9 시행 예정)에 따른 자  
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원

-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\*하여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  
택은 저소득층, 청년·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 
공급한다.

\* 가로주택은 최대 30%,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조정(최대 100% 가능)

- 또한 총사업비의 최대 70%까지 저금리(연 1.5%) 용자\*를 실시하여  
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, 고령층도 넓은 거주지를 정비할  
수 있도록 지원한다.

\*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%까지 저금리(연 1.5%) 용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  
주택을 연 면적의 20%이상 공급하면 용자한도를 70%까지 확대

- 역량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  
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\*한다.

\* 종전에는 BB+ 등급 이상만 참여 가능했으나, CC(자율주택), CCC+(가로주택)  
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

-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 
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(주택도시기금 용자 등)하고, 건설이  
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\*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 
지원할 계획이다.

\* LH가 선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

○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혁신공간  
창출도 지원한다.

-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(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) 조성을 추진('18.7~)하고,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'도시재생 첨단산업 공간'을 지정('18.11)하여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.
-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\*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-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선정(4곳 이상, '18.8)할 계획이다.

\* 복지(헬스케어), 교통(스마트 주차), 문화(VR 관광정보), 주거(스마트홈), 안전(지능형 CCTV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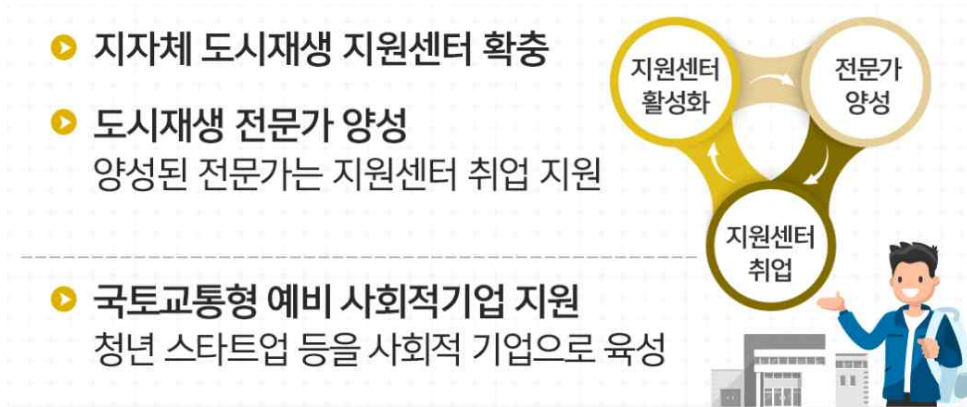
○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.

-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('18.4,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)
- 이에 근거하여 포항시 홍해읍의 안전보강, 지역사회 복원, 지역 명소화 등 종합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.

-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,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하여('17년 77개 → '18년 100개이상) 매년 1천 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, 양성된 전문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취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.
-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스타트업 등을 “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”으로 지정('18.6~)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,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(코워킹시설, 창업시설 등 연 1.5%)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.





○ 이와 함께 ‘주민참여 컨설팅단\*’을 운영하여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의 재생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\* 전문가(공간, 지역공동체, 서비스디자인, 청년창업 등)와 주민으로 구성(10명 내외)

○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(17.12, 도시재생특별법 개정) 지역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, ‘공공상생상가\*’ 시범사업에 착수(18.9~)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내몰림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.

\* 뉴딜지역 내 기존 영세상인,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가

□ 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도 확립한다.

○ 전문가,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5년 간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계획 및 전략인 ‘로드맵’을 마련(18.2~3)하고 도시재생특별법,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·제도도 정비(18. 하반기) 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 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(18.3~)하고,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 개발(R&D)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.

국토교통부 2018 업무계획



#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

##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

<p><b>[특별재생지역 지정]</b> 포항 흥해읍 종합 재생 커뮤니티 복원, 지역 명소화</p>	<p><b>[68곳 시범사업 착수]</b> 지역 혁신거점 조성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</p>	<p><b>[100곳 내외 신규 선정]</b> 지자체 자율성 확대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 활성화</p>
--	--	--

##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

- 계획계약제도 시범사업 추진  
\*지자체 주도 계획수립 중앙정부 계약·지원
-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 
지역경쟁력 강화
-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생활인프라  
최소기준 도입

**강소도시(권) 육성 전략(안)**

## 지역거점 육성

<p><b>혁신도시 시즌 2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별 중장기 로드맵 마련 ('18.10)</li> <li>인프라 확충,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,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(18%)</li> </ul>	<p><b>행복도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</li> <li>산·학·연 클러스터 조성</li> <li>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</li> </ul>
<p><b>새만금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</li> <li>SOC 조기 확충 및 새만금 산단 혁신</li> <li><small>*새만금~전주고속도로 착공('18.6) 남북도로2 발주('18.1)</small></li> </ul>	<p><b>산업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창업, 혁신생태계 선도모델로 조성</li> <li>지방 도시첨단산단에 판교 모델 적용('18. F)</li> </ul>

##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비전 설정

**기존 국토종합계획**

- 중앙정부 중심
- 정사전형 계획
- 확장적 개발 패러다임
- 개발과 환경의 대립

**5차 국토종합계획**

- 지역/국민 중심
- 지점전략형 계획
- 압축적 재생 패러다임
- 개발과 환경의 통합관리

## 1.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

### □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체계 구축

- 혁신도시·행복도시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국토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
  -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고,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**계획계약 시범사업 추진**(‘18, 공모)
-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**전문 컨설팅\***을 시행하고 지역 개성을 살릴 수 있는 **지역디자인 관리체계 도입**(‘18.5) 등 **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원**
  - \* 융복합(6차 산업 등), 재생형, 연계·협력 사업 등을 중심으로 11개 시범 컨설팅 추진

### □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

- (혁신도시)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토대로 **중장기 로드맵 마련**(‘18.10)
  - ‘살고싶은 미래형 도시’로 조성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등 **혁신교통체계를 도입**하고, **스마트시티 기술\***도 적용(‘18.12)
    - \* 이전기관 특성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구축(예: 나주 에너지, 김천 교통)
  - **지역인재 채용 의무화**(‘18.1, ‘22년까지 30%), 인재양성을 위한 **오픈캠퍼스 개설**(‘18.7), **지역발전계획 수립** 등 **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역할 강화**
  - **연관기업 이전촉진**, **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개소**(‘18.12) 등을 통해 **혁신도시 산·학·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**
- (행복도시) 행정기관 추가이전 등 **자족기능을 확충**하고 **중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「광역도시계획」 변경\***, **지역교류 활성화** 등 추진

- \* 광역권내 인구규모 설정, 녹지관리계획, 경관계획, 도시별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마련 등
- (새만금)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하고, 속도감 있는 후속 매립·개발에 착수
- 「재생에너지 3020」 과 연계, 태양광·풍력사업 추진('18.9, 계획수립)

## □ 산업단지를 활용한 혁신생태계 구축

- (판교 2밸리) 창업 및 혁신성장 생태계의 선도 모델로 조성하고, 다른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혁신성장 모델 확산\*
  - \* 지방 도시첨단산단(대구)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계획(안) 마련('18.12)
  - 기업성장센터 등 공공임대 창업공간을 확대(500개 → 1200개社)하고, 관계부처·지자체의 창업·혁신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
- (국가산단) 전주(탄소) 산단지정을 완료한 뒤, '17년 지정된 경남(항공)·밀양(나노)과 함께 본격 조성하고 신규후보지 선정도 추진('18.6)

## □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

- (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) 계획 수립을 완료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,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모델로 육성
  - 신규지역(7개)은 산업·SOC 등으로 연계 분야를 다각화\*하고,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, 예산지원 제도화 등 추진
  - \*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계획(경기),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(경북+울산) 등
- (강소도시권)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중·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\* 추진
  - \* 계획계약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규제완화,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도 추가 검토
- (역사문화권) 고유의 역사유산을 매개로 연계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역사문화권 발전방안을 수립('18.9)하고, 가야권을 선도적으로 추진
- (동서화합지역) 섬진강 양안의 자연·문화자원을 아우르는 '섬진강

## 2.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

### □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착수

- '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성공사례 창출
  -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등 사업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('18.1) 하고, 관문심사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
- '18년은 지역의 재생 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대상지 100곳 내외를 선정\*('18.8)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
  - \*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
  - 광역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(2/3수준 자체선정)하고, 주민제안사업을 활성화('18.4) 하는 등 지역 수요를 최우선으로 감안

### □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

- (혁신공간 창출) 지역의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(도시 재생어울림 플랫폼) 조성('18.7~), '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\*' 지정('18.11)
  - \*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일부 면적을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개발
- (스마트 도시재생) 노후도심에 스마트기술\*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-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 선정(4곳 이상)
  - \* 복지(헬스케어), 교통(스마트 주차), 문화(VR 관광정보), 주거(스마트홈), 안전(지능형 CCTV) 등
- (재난지역 치유) 지진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\*하여 안전보장, 지역사회 복원 등 종합지원 착수('18.7)
  - \*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('18.4)하여 포함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
- (노후시설 정비)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·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('18.3) 및 저리 기금융자\* 실시
  - \* 총사업비의 50%까지 연간 1.5%이하의 금리로 융자실시 및 보증상품 제공
  -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담팀이 원스톱으로

지원하는 체계를 구축('18.12, 시범사업 공모)하고 기금상품 개발

## □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 체계 구축

- (지역참여)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실천형 교육을 시행하고,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\*
  - \*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('17, 77개 → '18, 100개 ~)하여, 채용·활용
  - 참여형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·추진하는 “주민참여 컨설팅단” 운영
    - \* 전문가(공간, 지역공동체, 서비스디자인, 청년창업 등)와 주민으로 구성(10명 내외)
  -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풀뿌리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,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\* 착수('18.6)
    - \*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後 고용부사업(인건비·보험료 등)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
- (젠트리피케이션 예방) 뉴딜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,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
  - 표본확대 등 현황조사를 내실화하고, 종합계획 수립, 분쟁조정,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(現 5년) 등 개선방안 마련\*('18.9)
    - \* 국토부·법무부 공동 정책협의회에서 논의(「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」 개정 사항)
  -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 착수('18.9~)

## □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반 확립

- (인프라 정비)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로드맵을 마련('18.2)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 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('18.10)
  - 「도시재생특별법」도 환경변화, 뉴딜정책 등을 반영하여 개정\*('18.11), 도시재생특위(위원장: 국무총리)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('18.7)하여 활성화
    - \* 도심 쇠퇴도 기준 정비, 주민 발굴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 지원 등 제도개선
- (금융지원)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금융상품\*을 개발('18.3~)하고,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재원 확충방안도 검토('18.6)
  - \*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품 개발, 녹색·장기방치건축물 등 검토

- (연구개발) 도시재생실증연구(도시재생R&D, '14.7~'18.10)를 마무리하여 뉴딜사업 매뉴얼을 개발·보급하고 신규 연구과제 기획('18.9)